

특별기고



탁인석
문화칼럼니스트

어렸을 때 집안 행사에 나가보면 “우리 탁씨는 광주 성씨 탁·노·리 중 맨 먼저 나오는 성씨이다”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제 무슨 말일까 곧 골 궁궐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역사나 고사에 밝은 강원구(한중문화교류회장) 박사를 만나 ‘탁·노·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뒀 그런 게 있어요” 정도로 답변을 들었다. 2018년 경림정 학술대회를 준비하게 됐다. ‘경림정’은 여말선초의 대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탁광무 선생의 아호이자 정자 이름이기도 하고 선생은 당대의 정몽주, 정도전, 이색, 문익점, 이순인, 이재현 등과 깊은 교류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호남’이란 지명을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 호남 정자문화의 효시를 열어준 분이다. 학술대회는 경림정 선생을 여러 의미에서 조명하면서 성대하게 마칠 수 있었다. 광주를 광주답게 한 인물에 필문(門) 이선재(李先齊·1390-1453) 선생이 알려져 있고 그에 못지않은 인물로 경림정(景濂亭) 탁광무(卓光茂·1330-1410) 선생으로 거론하고 있어 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거기에다 당시 광산 탁씨는 ‘권문세족’으로도 명성이 높은 명문거족이었는데 이는 조선의 양반하고는 다른 개념이며, 고려 때 벼슬이 높고 번창한 집안을 일컫는 말로도 통한다. 이 같은 세력들도 이성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진사대부에 밀려나게 된다. 어쨌든 탁·노·리 성은

600년만에 만난 광주토박이

시조(始祖)들의 관향(貫鄕)에다가 광주 땅에 오래도록 뿌리를 내린 토성이었다. 간단한 것 같은 이들의 배경에는 광주만의 남다른 자긍심이 밀 받쳐져 있다. 조선 초에 ‘조선팔도의 노래’가 지금의 트롯처럼 유행했던 모양이다. 고려시대에 전국이 5도 양계로 나뉘어 있었고 각 지역의 특색을 담아서 민간에 널리 가창되는 민요나 속요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들 노래가 조선 건국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전승되었으리라 추론된다. 조선 건국은 모든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중 민요나 속요도 이 무렵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불렀을 것이다. 우연하게도 ‘조선팔도의 노래 98’에서 광산(光山)의 특성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동쪽에는 장평(昌平)이요 남쪽에는 화순(和順) 남평(南平). 서쪽은 나주(羅州)이고 북쪽은 진원(珍原)이라. 백제의 무진주(武珍州)인데 경덕왕 때 무주(武州)로다. 〈중략〉 탁노리김(卓盧李金) 채장정박(蔡張鄭朴) 진허반성(陳許藩成) 승유(承庾)가 산다. 무등산(無等山) 양림(陽林) 삼각(三角) 건지(巾之) 어등(魚登) 솟아있고 〈중략〉 인물은 김길(金吉)의 후손이요 정세운(鄭世雲)과 탁광무(卓光茂)라. 여기에서 맨 먼저 등장하는 탁·노·리를 볼 수 있다. 여기에 광산김씨도 함께하지만 이는 네자 씩의 리듬에 맞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광산김씨는 다른 성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죽이어서 별도로 언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다음의 문헌으로는 1454년(문종 2년)에 발간된 『세종실록지리지』이다. 이 책은 전국

8도에 속한 328개 군현의 역사, 지리, 풍속, 인물, 토산물 등을 망라하고 다양한 정보가 체계 있게 편집된 지리서다. 이에 따르면 무진군 편에서는 광주 토성 13개 성이 적시된 자리에 ‘탁노리’가 소개되고 있다. 그 다음 근거 문서로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들 수 있다. 『증보문헌비고』는 250권 50책으로 구성됐으며, 1894년 갑오개혁으로 야기된 변화한 조선의 문물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이 문헌에는 우리 역사를 통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 갈래가 16고(考)로 이뤄졌는데 세족의 항목에서는 단군(檀君) 때에 예국(濊國)의 군장(君長) 여수기(余守奇)에게 서씨(徐氏) 성을 내려준 것을 비롯해 마한,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의 각 성씨와 성(姓)의 유래에 대해 총 8권에 걸쳐 서술했다. 바로 여기에 광주 토성이 상세히 기록돼 있고 탁·노·리가 순서로 출현한다. 여기까지 살펴본 광주 토성 13개 성 중 탁·노·리 성은 광주의 대표성을 갖는 토박이 성씨이고 여말선초 때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고려가 조선으로 비록 나라 이름이 달라졌어도 지극히 가까운 이웃이었음을 역사적 사실로 짐작하게 된다. 이런 근거 위에 실로 600년 만에 광주를 광주답게 하고 광주의 정체성을 담보한 그 뿌리를 탁·노·리에서 찾기 위해 이를 위한 대표자 모임체를 결성했다. 토박이 3개 성씨 대표성을 갖는 문중인물이 모인 것이다. 600년이 흘렀지만 그대에 광주땅에서 아주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이다. 실로 광주 땅에 박수받을 의미 있는 결사체가 아닐까 한다. 꺼져서 잊혔던 불씨를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이 모임을 ‘광주뿌리회’로 명명했다. 이게 토박이 광주 사람이 만들어가는 진짜 광주의 ‘문화’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현장칼럼



오은하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기술사·공학박사

화학물질을 둘러싼 편리함과 위험의 줄다리기. 현대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화학물질은 현대 사회의 편리함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소다. 의약품, 세제, 식품 포장재, 스마트폰과 자동차 부품까지 우리는 화학물질 덕분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간과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 적절히 통제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인체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23년 발생한 메탄올 집단중독과 실명, 2022년 트리클로로메탄 사고로 인한 급성 간질 환 발생,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은 화학물질이 가진 양면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생활 속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줬다. 이처럼 화학물질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이 양면성을 직시하고 생활 속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생활 속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알기’다. 어떤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물질이 어떤 위험성을 가졌는지 알아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바로 이 ‘정보의 부재’에서

화학물질, 편리함과 위험 사이 줄다리기

시작됐다. 제조사는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소비자는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매일 독성 물질을 흡입했다. 그 결과 수백명이 생명을 잃거나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게 됐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사망 및 장애 보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피해를 완전히 복구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사후 구제’보다 ‘사전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제품 구입 시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세제, 방향제, 세척제 등을 구매할 때 성분과 안전성을 살펴보는 것은 이제 필수다. 둘째, 불필요한 화학제품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실천이다. 필요 이상으로 다양한 방향제, 탈취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화학물질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연환기, 물리적 청소 등 비화학적 방법을 우선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셋째,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 포털’과 같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해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다. 넷째, 위험 징후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고 조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더 큰 규모의 대응이 필요하다. 여수산단은 전국 화학물질 취급량 1

위 지역이다. 2022년 여천 NCC 폭발 사고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지역사회 전체에 충격을 줬다. 사고 원인은 안전관리 부실과 작업 절차 미준수였다. 이처럼 대형 산업재해는 개인 차원의 노력을 넘어, 국가와 기업이 법·제도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화학물질 사고는 더 이상 특정 산업계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일상은 이미 다양한 화학물질과 맞닿아 있으며 그로 인한 위험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을 의심하고, 공부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 일이 결국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개인도 이제 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하나를 고를 때 ‘편리함’보다 ‘안전성’을 먼저 따지는 사회적 감수성이 필요하다. 대형 사고에만 분노하는 것을 넘어, 평소 작은 실천을 통해 위험을 줄여나가는 생활 속 혁명이 절실하다. 특히 이제 는 ‘NO DATA, NO MARKET’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 인체 영향, 환경 영향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 제품은 시장에 출시돼선 안된다. 데이터 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하는 것은 무책임한 위험 확산과 다를 바 없다. 철저한 정보 공개와 안전성 검증이 제품 유통의 정체가 돼야 하며 소비자 역시 정보의 유무를 구매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화학물질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이제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철저한 예방, 투명한 정보, 책임 있는 행동만이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독자투고



최근 자영업자를 노리는 ‘노쇼 주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수법은 전화로 다량의 음식이나 물품을 주문한 후 “미리 결제하겠다”며 문자로 QR코드나 결제 링크를 보내고, 이를 클릭하면 소액결제 피해를 입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방식이다.

“선결제 해주세요” 노쇼 사기의 시작입니다

특히 개업식, 단체 회식 등 당당한 명분을 내세우며 대량 주문을 요청하고 “출장 중이라 전화 통화가 어렵다”, “링크로 결제하자”는 방식으로 경계심을 허문다. 피해 대상은 소상공인이다. 매출 압박 속에 대량 주문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결국 재료 낭비는 물론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영업자의 경각심이다. 과도한 주문, 링크 결제 유도, 비정상적 문자 연락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심하고, 링크 클릭을 삼가야 한다. 노쇼 사기 예방의 시작은 ‘의심’에서 출발한다. 한 번의 주의가 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조영철·장흥철서〉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일단락된 광주 중심상업지구 용적률 상향 조례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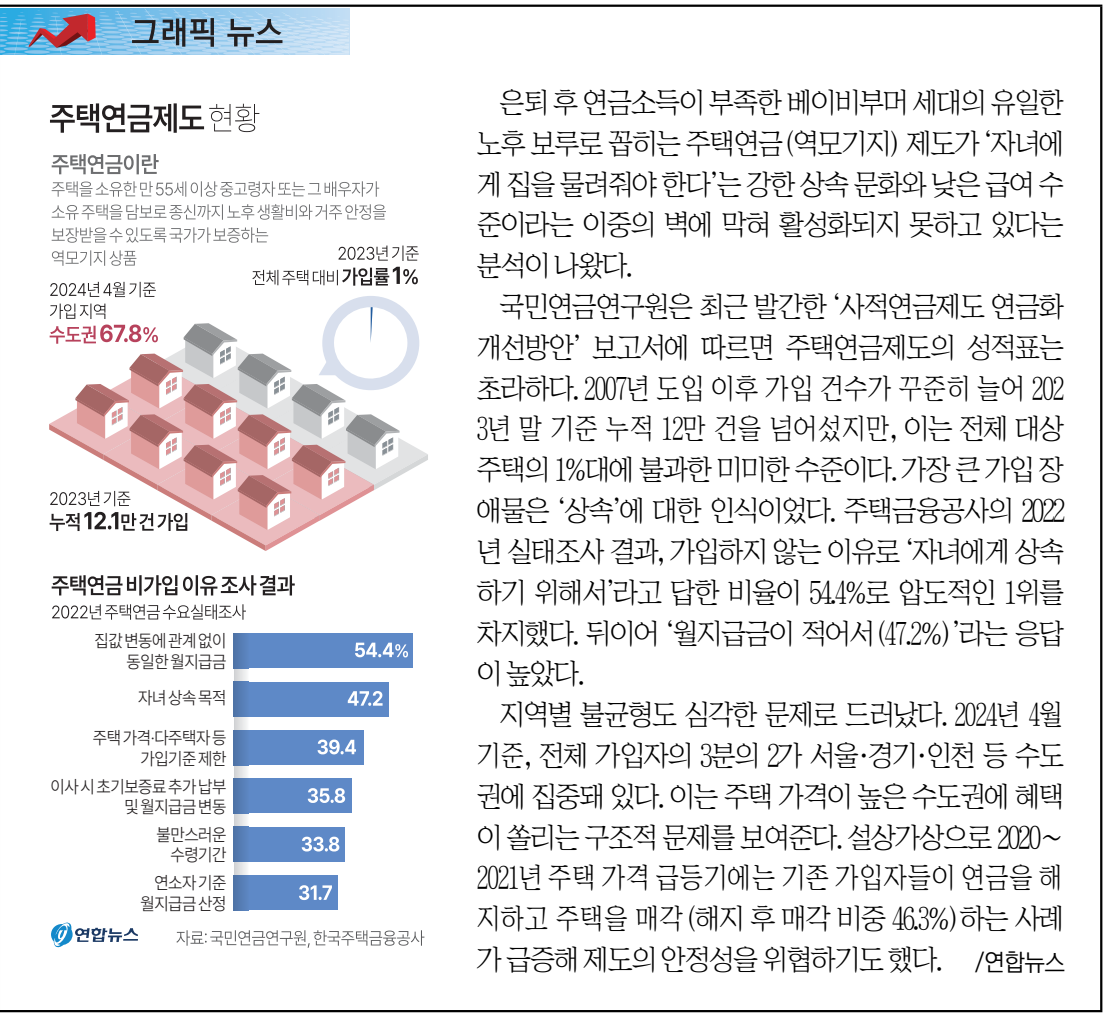
광주시가 재의를 요청한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조례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광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조건인 재석의 원 중 찬성 2/3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주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의 우려를 광주시는 제기했다. 시민단체도 반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업지구를 아파트로 바꾼다고 해서 도심 공동화와 상가 미분양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의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민원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비칠 수 있다며 중심상업지역만이 아닌 전체적인 용적률 개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총장·금남로와 상무, 참전지구 등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조례안이 결국 폐기됐다. 시의회는 전원 입장문에서 시민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뜻을 겸허히 존중한 결과라고 물리쳤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미 광

주지역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최근엔 공동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다분히 주거정책에 역행할 수 있었는데, 논란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만큼 사실상 민선9기로 공을 넘기게 됐다. 돌아보면 불쌍사나운 사태가 빚어졌다. 강기정 시장이 본회의에 불참하며 의회를 비판했고, 일부 시의원은 의회를 무시한다고 맞서는 등 첨예한 갈등 양상을 드러냈다. 팽팽하게 찬반이 갈렸으나 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현명한 선택이다. 환영한다. 주거시설 용적률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 중심상업지역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방지해선 안 된다. 건설업 등 지역경제의 활력 및 침체된 상권 회복도 더 늦출 수 없다.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진통을 거울삼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공동체가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두가 인정하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의 미래를 위한 일이어서다.

광산교육지원청 대신한 센터 개소로 기대 크지만

광주 교육의 숙원사업이다. 이장선 시교육감의 공약인 광산교육지원청 원상 복구가 여의치 않은 가운데 교육행정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광역시 단위에서 처음으로 광산지원센터는 하남3지구에서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평생교육, 국제교육, 유치원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교육국제화 특구, 유보통합, 다문화 등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또 광산구 맞춤형 정책을 발굴·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을 위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역민의 오랜 과제가 해소되고 다양한 교육 수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광주지역에 있는 동·서부 2개 이외 또 다른 지원청을 신설하면 타·시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건물 신축 등에 들어가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광산교육지원청을 불허하고 있다. 특히 현재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효율성을 지적한다. 광산교육지원청은 1988년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직할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됐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광산구와 서구·남구지역의 교육 행정을 지원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0

00년대 들어 대단위 택지 개발 등 급격한 도심 발달로 인해 인구 40만명, 학생 6만여명 규모로 커진 광산구 전담 교육지원청이 신설돼 학생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밀 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부하가 걸린 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도 경감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학부모 등이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등 계속해 요구하고 관련법 개정, 예산 확보, 주민 의견 수렴 등에 애써왔지만 별반 진척이 없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광산지원센터가 지역 현안에 맞춤형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뒀야 하겠다. 최근 다문화학생이 많아지는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균형적 접근이 나서야 한다. 교육지원청 설립은 교육부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에서 지원센터로 방향을 틀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관할 조정까지 검토했으면 한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국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650-2007
	문화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 (주)·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